

## 햇빛과 바람으로 여는 전남의 내일

의정단상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라남도도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농여촌 지역에서는 젊은 세대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탈하면서 고령 인구만이 남아 지역 공동체의 존속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신안군을 들 수 있다.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모델을 도입한 ‘햇빛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태양광 수익을 배분하여 재생에너지로 인한 소득 분배의 새 지평을 열었다.

뿐만 아니라 1000억원 규모의 ‘군민펀드’를 조성해 군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남 서남해안을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2033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 발표되며 신안은 국내 최대 해상풍력 거점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전체의 공동 소득을 높이고 이를 다시 마을공동체를 위해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시에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통해 매달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으며, 수익 일부를 주민들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에 재투자하고 있다.

한편 농업이 주요 생업인 전남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또 다른 가능성으로 주목된다. 이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업과 전력 생산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농가에 안정적인 부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농가들이 농업 소득 외에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의 이탈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농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영농형태양광특별법’ 제정을 논의 중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요건 하에 농지에서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벗어나 각 지역에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현지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햇빛연금’ 등 주민이 이익유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산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더 이상 지방정부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 전략 차원의 핵심 의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라남도도는 풍부한 태양광·해상풍력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이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정착될 때 지역 경제의 자립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를 실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재생에너지 전략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닌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만드는 사회적 투자이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가 오를수록 더 나은 내일의 전남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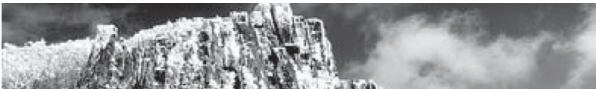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시스티나 성당에서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가톨릭 추기경단의 비밀회의)가 열린 지난 7일(현지시각) 성당 굴뚝에 갈매기 떼가 얹은 모습이 포착됐다. 2013년에도 교황 선출 당시 갈매기가 굴뚝에 머문 바 있어 눈길을 끌었다. 당시에도 갈매기 출현 뒤 교황이 선출됐고, 일부 가톨릭 신자들은 이를 성령의 징조로 받아들이며 의미를 부여했다.

‘라이프사이트’ 엑스 캡처

### 서석대

1972년 3월 31일, 옛 소련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2대의 우주선이 발사됐다. 금성에 착륙해 미지의 행성 금성을 연구하기 위한 무인우주선 베네라 8호와 또 다른 쌍둥이 우주선이었다. 지구에서 금성까지 평균 거리만 1억 7000만km. 소련은 실패에 대비해 2대의 우주선을 발사했고 이 중 베네라 8호가 그 해 7월 22일, 금성 표면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 하지만 함께 발사됐던 또 다른 우주선은 궤도 진입에 실패해 지구에 갇히고 말았다.

비운의 우주선 코스모스 482호였다. 소련은 성공한 베네라 8호와 달리 실패한 우주 탐사선을 위장하기 위해 ‘코스모스 482호로 명명했다. “기술과 예술이 살아있는 우주의 서사극이다.” 지난 2013년 개봉된 ‘그래비티(Gravity·중력)’는 인공위성의 잔해와 우주왕복선이 부딪치면서 우주공간에 내던져진 우주비행사들의 재난을 그린 영화다. 우주 공간을 유영하며 허블 우주 망원경을 수리하는 초보 우주 비행사 라이언과 베테랑 맷. 그들에게 아름다운 지구를 내려다보던 평화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러시아의 미사일 실험으로 발생한 ‘잔해 폭풍’으로 우주선은 파괴됐고 광대한 우주는 그들에게 공포였다. 초속 22.35km의 우주쓰레기가 끊임없이 날아오는 것도 두려움이었다. ‘우주쓰레기의 가공할 위협을 예술로 승화시킨 영화’라는 게 당시 평론가들의 평가였다.



우주를 향한 인간의 꿈은 끝없는 우주탐험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인류의 꿈과 반대로 우주쓰레기는 영화 속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되고 있다. 유엔우주사무국(UNOOSA) 우주파편 환경 모델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구 궤도에 존재하는 우주쓰레기는 1억 100만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1mm~10cm의 소형 쓰레기가 1억 2900여만 개, 10cm 이상은 3만 4000여 개에 달한다. 우주쓰레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이를 치울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도 지구환경의 오염과 훼손이 재앙으로 이어지듯, 늘어나는 우주쓰레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우주로 발사된 후 지구 궤도를 떠돌던 금성 탐사선 ‘코스모스 482호’가 9~11일 사이 대기권에 재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1972년 옛 소련에서 발사된 뒤 추진체가 고장나 지구에 갇혔던 바로 그 우주선이다. 다행히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 다만 견고한 탐사선의 구조를 감안하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재돌입 시점과 장소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불안을 키운다. 우주는 오랫동안 인류에게 도전의 상징이면서 신비의 원천이었다. 임계치를 넘어선 육상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넘어 이제는 우주쓰레기까지, ‘쓰레기 행성’으로 전락한 지구의 미래가 답답하다.

이용환 논설실장

## 문화기득권 포기 않겠다는 서울예술단

### 변화 받아들이는 용기 필요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서울예술단이 조직적인 반대에 나섰다. 국립 예술단체로서 공공 책임을 감당해야 할 기관이 지역 이전에 반기를 들며 ‘일방통행’, ‘정체성 훼손’ 같은 논리를 앞세우는 모습에 지역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은 압도적으로 서울에 집중돼 왔다. 최근 5년간 전체 공연의 86.3%가 서울에서 이뤄졌고, 광주는 0.5%, 전남은 0.6%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자료는 문화예술의 수도권 독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전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예술단체가 수도권 시민만을 위한 공연에 집중해온 현실은 명백한 불균형이며, 시정을 위한 조치가 시급했다.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구조를 바로잡는 시금석이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적지 않다. 지역 예술계는 물론 시

민들도 “문화예술 향유는 서울만의 특권이 아니다.”며 정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예술단이 국립단체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집단 반발에 나선 점은 문화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다. 물론 구성원의 불안감과 내부 갈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낯선 환경, 변화된 창작 생태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국책을 전면 부정하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서울예술단이 진정 예술의 공공성과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을 중시한다면, 자신들이 쌓아온 역량을 지방에서 새로운 창작으로 꽃피우겠다는 각오가 우선돼야 한다.

문체부는 서울예술단 측과 수개월 전부터 논의가 이어졌고, 간담회와 설명회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방 통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제 남은 건 서울예술단의 결단뿐이다. 국립단체가 시대적 전환기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문화예술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반발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다. 지금이야말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공성을 향한 책임 있는 선택을 보여줄 때다.

## 북구 청년 공직자들, 색다른 도전 반갑다

### ‘5월’ 맞아 6개 기념사업 추진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 공직자들이 색다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진상규명부터 책임자 처벌 등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고 광주를 고립시키려는 극소수 인사들의 준동이 멈추지 않은 현실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도전이 반갑다. 이들의 의지가 5·18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길 기대한다.

북구 6급 이하 젊은 공직자로 구성된 청년간부회의 31기가 주관하는 사업은 모두 6개에 이른다. 우선 5월 한 달 동안 북구 각 부서 통화 시 5·18을 기리는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9일에는 청년간부회의와 신규 임용 공직자들이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추모 활동에 나선다. 16일에는 북구청 구내식당에서 5·18 당시 시민들의 연대와 나눔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17일 전남대학교 정문, 광주역 광장, 무등경기장 정문, 옛 광주교도소 등 북구 관내 5·18 사적지 4곳에서 도보 순례 등을 펼치고 오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18분 북구청사

내 5·18 관련 오디오 방송도 운영한다.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를 넘어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원동력이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특화 프로그램은 세대 간 단절을 해소하고, 5·18 정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는 의미가 크다. 인권과 시민 참여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광주의 역사를 지역의 젊은 공직자가 직접 재해석하는 것은 또 지역 문화와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광주의 5월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번 청년공직자들의 도전이 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과 역사적 피로감을 해소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기념일에 맞춘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중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광주의 새로운 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5·18정신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것이야말로 5·18을 오랫동안 기억하는 지름길이다.

| 全南日報                           |      |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               | 논설실장 이용환                                                    |        | 편집국장 박성원 |               |
|--------------------------------|------|------------------------|---------------|-------------------------------------------------------------|--------|----------|---------------|
| 민주주의 구현<br>진실보도 실천<br>지역개발 선도  | 대표전화 |                        | (062)527-0015 |                                                             | 경영지원팀  |          | (062)510-0421 |
|                                | 기사제보 |                        | (062)510-0331 |                                                             | 광고영업팀  |          | (062)519-0710 |
|                                | 편집부  |                        | (062)510-0412 |                                                             | 문화체육부  |          | (062)510-0351 |
|                                | 취재1부 |                        | (062)510-0380 |                                                             | 온라인뉴스부 |          | (062)510-0461 |
|                                | 취재2부 |                        | (062)510-0394 |                                                             | 사진부    |          | (062)510-0391 |
| www.jnilbo.com<br>m.jnilbo.com |      | 정치부                    |               | (062)510-0340                                               |        |          |               |
|                                |      | 구독료 월 1만5천원<br>1부 800원 |               |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br>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        |          |               |
| 구독신청 (062)510-0471             |      |                        |               | 광고문의 (062)512-0100                                          |        |          |               |
| FAX (062)510-0436              |      |                        |               | 서울지사 (02)725-8890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               |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